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진 | 김시백

Jeonbuk Institute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책임
: 김시백. — 전주 : 전북연구원, 2015
p. ; cm. — (Jthink ; 2015-PR-07)

ISBN 978-89-6612-134-2 93320 : 비매품

고용 창출[雇用創出]
일자리 창출[一創出]

321.524-KDC6
331.12-DDC23

CIP2016008307

연구진

연구책임 김시백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5JU1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개요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흐름	5
제2장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9
제1절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	9
1. 중앙 정부 정책 동향	9
2. 지방 정부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9
1.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간의 관계 분석	19
2. 노동 시장 행태 분석	20
3.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23
제3장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	27
제1절 산업 구조 변화 분석	27
제2절 지역 경제 성장 유형 분석	31
1. 분석 방법론	31
2. 분석 결과	33
제3절 성장요인 변화 분석	40
1. 분석 방법론	40
2. 분석 결과	44
제4절 시사점	54

제4장 지역 고용 구조 변화 분석	59
제1절 전라북도 노동시장 현황 분석	59
제2절 노동시장 행태 분석	62
1. 분석 방법론	62
2. 일자리결합모형 분석	64
제3절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77
1. 분석 방법론	77
2. 분석 결과	79
제4절 시사점	82
제5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87
제1절 산업 및 고용 정책	87
1. 정책 방향	87
2. 추진 과제	88
제2절 청년 일자리 정책	91
1. 정책 방향	91
2. 추진 과제	92
제6장 결론	97
제1절 연구 요약	97
제2절 정책 제언	99

표 목 차

[표 2-1]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 현황	10
[표 2-2] 청년 관련 일자리 정책	13
[표 2-3]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고용영향평가)	16
[표 2-4]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약(광역시 단위)	17
[표 2-5]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약(도 단위)	18
[표 3-1] 산업별 특화도 변화 추이(2007년~2013년)	30
[표 3-2]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결과(2000년~2013년)	34
[표 3-3]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 요인 순위 비교(2000년~2013년)	35
[표 3-4] 지역별 고용탄력성 비교(2000년~2013년)	37
[표 3-5] 지역별 고용계수 비교(2000년~2013년)	38
[표 3-6] 산업별 고용탄력성 및 고용계수	39
[표 3-7]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에 의한 산업 성장 기여도 분류	44
[표 3-8]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2007년~2013년)	45
[표 3-9]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1,2차 산업)	47
[표 3-10]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3차 산업)	48
[표 3-11]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2007~2013년)	50
[표 3-12]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1,2차 산업)	51
[표 3-13]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3차 산업)	52
[표 3-14] 산업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전라북도 산업 유형 분류	53
[표 3-15]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65
[표 3-16] 청년계층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66
[표 3-17] 대학졸업 취업자의 잔류 및 유입, 유출의 지역적 차이	70
[표 4-1]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72
[표 4-2]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74
[표 4-3] 지역별 청년계층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75

[표 4-4]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77
[표 3-18] 지역별 실업 요인 분해 결과(2014년)	80
[표 3-19] 전라북도 직종별 미스매치 규모	81
[표 3-20] 전라북도 연도별 실업 요인 분해 결과	82
[표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9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5
[그림 2-1]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및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11
[그림 2-2]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경과	12
[그림 2-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체계	12
[그림 3-1] 전라북도 산업별 생산액 비중 추이	27
[그림 3-2]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41
[그림 4-1] 전라북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59
[그림 4-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60
[그림 4-3] 연령별 고용률(%)	61
[그림 4-4]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61
[그림 4-5] 청년층 고용률(%)	62
[그림 5-1] 산업 및 고용 정책 방향	87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개요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선 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은 자동차/농기계 등의 가공 제조업에서 탄소산업의 확장, 농업의 6차 산업화, 토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가공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 혹은 사무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간 융합화가 진행되고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필요 일자리는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고급 인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 역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고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한편, 전체적인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을 제시되어야 함
-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 산업의 성장경로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수급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 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도 동반되어야 함
-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많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라북도 연령별 순이동 현황을 볼 때, 대학 졸업자 연령대인 25~34세의 역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 고용의 불균형이 아직까지 심각한 편임
- 전라북도에서 커플링 사업 등 다양한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고용의 질적 문제가 아닌 양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전라북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고용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여 공급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인력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고용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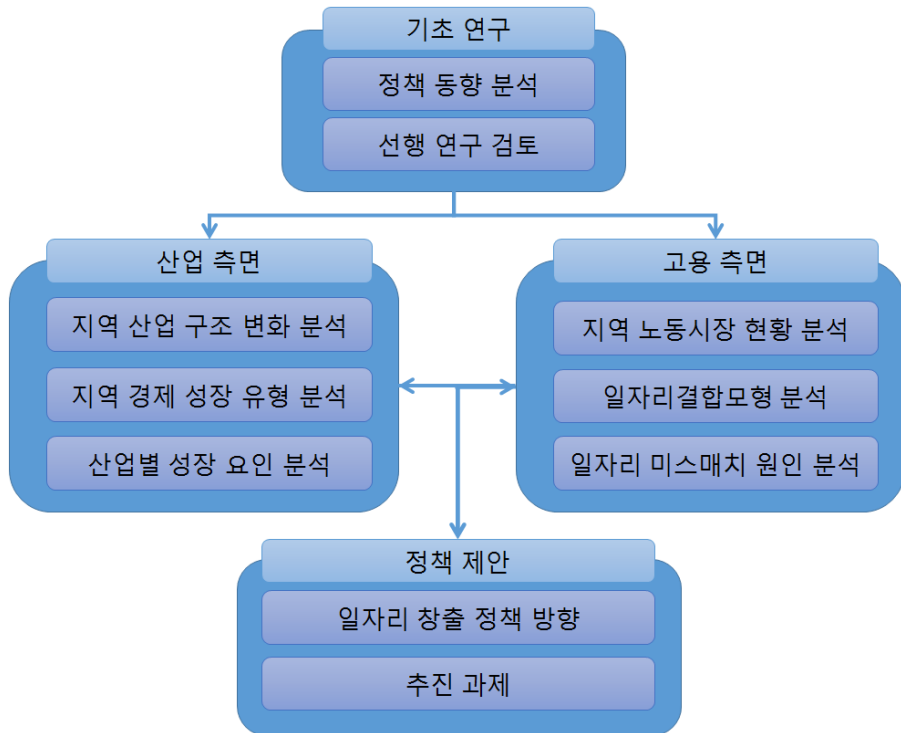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내용

-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 검토
 - 중앙정부 일자리 관련 예산안 분석
 - 지방정부 일자리 관련 공약 및 사업 분석
- 선행 연구 검토
 -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간의 관계
 - 노동 시장 행태 분석
 -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 지역 산업 구조 및 고용 구조 변화 분석

- 지역 경제 성장 유형 및 요인 분석
- 노동시장 행태 분석 및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제시

2.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

1. 중앙 정부 정책 동향

1) 2016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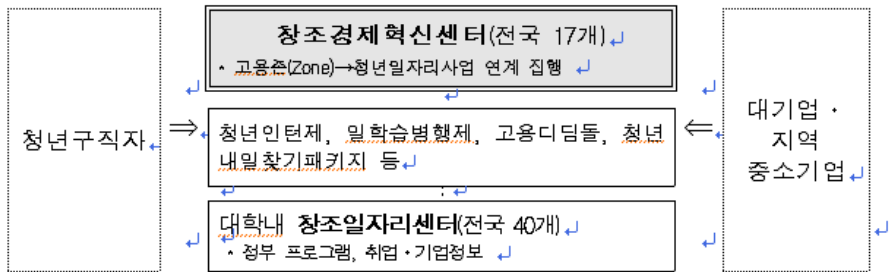
-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춰 2016년도 예산안을 마련함
- 그 중 일자리 분야 예산안의 경우 2015년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12.8%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은 2015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난 2조 1,213억원(20.6%)임
- 이는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3.0%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일자리 확충 특히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음
-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2가지로 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 ②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임
-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양질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세대간 상생고용제도 :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대상으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

[표 2-1]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 현황

구분	부처	사 업 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직접 일자리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68	435	267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1	83	△18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051	1,195	144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	979	130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50	100	50
직업 능력 개발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01	359	58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857	3,741	1,884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12	1,089	277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296	2,733	437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715	728	13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155	195	40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	29	7
	중기청	중소기업연수사업	229	206	△23
고용 서비스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58	165	107
	고용부	청년내일찾기패키지	940	1,474	534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356	421	65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35	-	△35
	고용부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25	-	△25
고용 장려금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1,662	1,941	279
	고용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619	619
	고용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	-	△15
창업 지원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946	1,133	186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652	753	101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307	375	68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338	364	26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600	-	△1,600
전체 67개 사업			17,584	21,213	3,629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09.09)

- 두 번째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일학습병행제 : 기존에는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재학단계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대폭 확대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 교육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학과 개편 혹은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를 지원
 -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
- 세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 운영 및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임



[그림 2-1]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및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2) 고용률 70% 로드맵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청사진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의 의의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①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도록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
 - ②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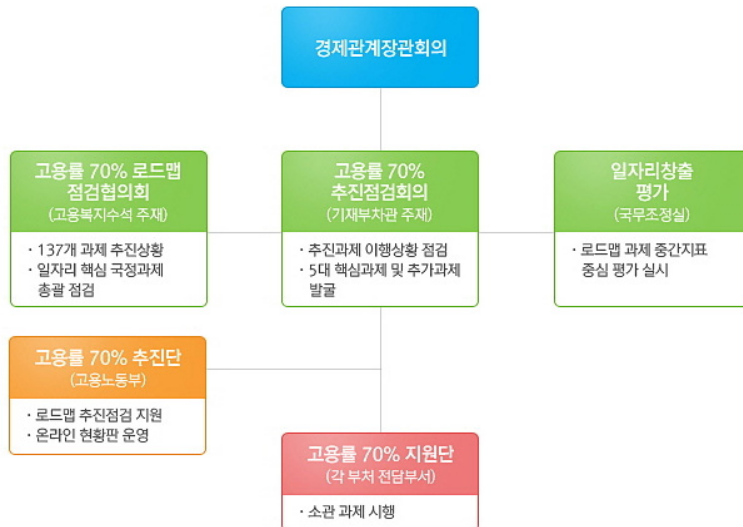
- ③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 참여 기회 확대,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근로시간 축소 등 고용창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
- ④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유인형으로 개편하고, 구직자에게 종합적이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



[그림 2-2]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경과

출처 :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

-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



[그림 2-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체계

출처 :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

- 경제관계장관회의 : 이 로드맵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 :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여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대 핵심과제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
-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협의회 : 고용복지수석이 주재하여 총 137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핵심 국정과제를 총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
- 국무조정실 : 로드맵 과제 중간지표를 작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 고용률 70% 추진단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로드맵 추진점검 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현황판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
- 고용률 70% 지원관 : 각 부처 전담부서가 맡아서 소관 과제를 시행

○ 추진 과제는 총 4개의 추진 전략의 총 1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전략 1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② 전략 2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③ 전략 3 :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 ④ 전략 4 :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 청년 관련 일자리 정책은 전략 3의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에 포함되어 총 9개의 세부실행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2] 청년 관련 일자리 정책

세부실행계획	주요 대책	내용	담당 부처
청년(총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3.12.18. 청년위원회)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 청년의 창업 열기 되살리기	청년위 고용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04.15. 국무회의)	- 학교교육·직업교육 내실화·자격 불일치 해소 - 구직·취업-선취업·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근속·전직-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경력 단절 방지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세부실행계획	주요 대책	내용	담당 부처
청년 해외취업지원 (K-Move)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3.10.24. 대외경제장관회의)	- 해외 현지 민간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 구인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 해외취업·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통합정보망 구축	고용부 산업부 외교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4.11.21. 대외경제장관회의)	-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일자리 개척 - 취업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 민간 및 정부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취업 전달체계 개선	고용부 산업부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체제로 전환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 학습 듀얼시스템 확산계획 (2013.12.10. 국무회의)	- NCS 개발 완료 및 기술변화 반영 시 스템 구축 - 교육현장에서 NCS 활용, 확산 - 기업현장에서 듀얼시스템을 활용한 NCS 안착	고용부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2014.01.22)	- NCS를 기반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 력 및 교육훈련 이수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개발 로 드맵 수립	교육부
일, 학습 병행제 도입	한국형 일, 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2013.08.29)	-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육성 - 법정부적 지원을 통한 도입 확산 - 법률제정을 통한 제도화	고용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2014.12.18)	- 일과 학습병행 등 현장중심 교육, 훈 련 확산, 능력중심 채용, 보상, 거버넌 스 구축 -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 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고용부 교육부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전문대학 육성 방안 (2013.07.18)	- 특성화 전문대학 100교 육성 - 수업연한 다양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세계로프로젝트 추진	교육부
부처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대책 연계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2013.10.02. 국무회의)	- 부처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대책을 연계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산업 단지 환경개선사업을 합동 공모, 심사 방식으로 전환	고용부 중기청
주요기업 인력 미스매치 범부처 협의체 가동		-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맞춤형기병제 도입을 통해 청년층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 등 유류인력의 중소기 업 맞춤형 공급 -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을 통한 매칭 강화	

세부실행계획	주요 대책	내용	담당 부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강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2013.10.25)	-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직자 입학이 이와 관련됨	교육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방안 (2015.01.08)	- 인턴기간 단축 및 기업지원금 축소 -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위탁운영기관 전문성 강화 -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2013.08.30)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고용부

출처 :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

- 국정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14년에 실시한 고용영향평가¹⁾의 결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를 발표함
- 총 2개 분야(창조경제, 규제개선)에서 각각 3개씩 정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됨
- 창조경제 분야는 예산 10억원당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 지원 기업들의 고용창출 성과를 미지원 기업들과 비교하고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종합평가함
- 규제개선 분야는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사항을 없앨 수 있고 고용창출 유인을 만들어 더 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평가하였는데, 장·단기적으로 창출가능한 일자리 개수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²⁾을 함께 실시하여 규제완화 및 R&D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매출증대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를 추정함
- 2014년에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현재 계획 단계인 정책의 향후 고용효과를 예측·평가하여 정책의 실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1) 고용영향평가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실시

2) 정량적 분석 : 거시경제 및 산업간 순환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등
정성적 분석 : 실태조사 및 FGI 등

[표 2-3]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고용영향평가)

분야	정 책	주 요 내 용
창조 경제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 재정지출 10억원당 35명 고용 창출 - 담당부처 및 예산 : 국토교통부, 1,057억원(2011~2014) - 사업내용 : 국토공간기반조성,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적재조사 사업
	환경기술 R&D 투자사업	- 재정지출 10억원당 28명 고용 창출 - 담당부처 및 예산 : 환경부, 6,597억원(2010~2013) - 사업내용 : 환경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 재정지출 10억원당 25명 고용 창출 - 담당부처 및 예산 : 중소기업청, 815억원 - 사업내용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규제 개선	장시간 근로개선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시, 18,500명/년 고용 창출 효과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26개 업종에서 10개로 단축 하도록 법 개정 추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 튜닝규제 수준 완화시 2020년까지 13,323명 고용 창출 효과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 자동차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 규정 정비, 부품인증제 도입, 대국민 튜닝 홍보 강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	- 4,854명 고용창출 효과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보다 소규모 필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년 4월 13일)

2. 지방 정부

- 작년 민선 6기를 위한 지방선서에 나온 각 지자체별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채워졌는데, 이는 이제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성과 지향에서 탈피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 향상 등 고용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 하나의 특징은 일자리 공약 중에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약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총괄

하는 부서 혹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꾀하고 있음

[표 2-4]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약(광역시 단위)

지 역	주요 일자리 관련 공약
서울(박원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 창조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여성/청년/어르신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 발굴 - 공공형 사회·복지서비스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인천(유정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 여성 일자리 만들기 본부 구성 -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
세종(이춘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고용복지센터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
대전(권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 청년일자리 총괄하는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 장애인 일감 및 일터 지원
광주(윤장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대구(권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를 살리는 3·3·5·5」일자리 정책 추진 (세부 공약 : 일자리 50만개 창출)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안정 (세부 공약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부산(서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세부 공약 : 전략산업분야 R&D로 연구직/전문직 일자리 2만개,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창업,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10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6만개, 중장년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1만개, 여성 및 서민복지관련 좋은 일자리 1만개)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4)

[표 2-5]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자리 공약(도 단위)

지역	주요 일자리 관련 공약
경기(남경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70만개 창출 (세부 공약 : 맞춤형 취업 무한지원서비스 10만개, 2030 슈퍼맨 펀드·경제민주화·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8만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15만개, 빅-파이 프로젝트 7만개, 서해안을 경기도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15만개,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투자활성화 촉진 10만개, 사회적 일자리 5만개) - Lady First 경기 (세부 공약 : 자녀 양육과 양립 가능한 수요 맞춤형 '10 to 4'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4050 여성 취업성공 지원)
강원(최문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충북(이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일자리 따뜻한 일자리 40만개 만들기 (세부 공약 : 사회적 경제 규모를 키워 지속가능한 일자리 늘리기, 5060세대·어르신·퇴역군인 일자리 창출,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충북형 특화산단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정된 일자리 추진)
충남(안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률 1위 유지 (세부 공약 : 충남청년 일자리펀드 설립 추진, 작은브랜드 100개 찾기 프로젝트 추진, 청년 CEO 500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 베이비부머세대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세부 공약 : 충남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시니어클럽 활성화 및 설치 확대)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경북(김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나·바'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세부 공약 :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설치, 청년 희망일자리 뉴딜정책, '5만 청년·노인 맞춤 일자리', '1만 여성·장애인 나눔 일자리' '4만 서민 바람일자리' 창출)
경남(홍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제주(원희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간의 관계 분석

- 지역 경제는 산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산업 성장은 다시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산업의 성장은 기술 수준이 불변이라고 할 경우에는 산업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거나,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두 가지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데, 산업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노동 수요가 늘어나 지역내 취업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늘어날 경우에는 산업 생산량 1단위 늘리기 위한 필요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내 취업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이러한 두 개의 영향력이 서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 성장이 지역 고용에 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지역 경제 요소와 노동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만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보다 생산량 증대에 따른 고용 증가효과가 더 높아 고용이 증가하는 주력산업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인숙(2014)³⁾은 고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주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과 산업 구조의 지표인 노동생산성, 투자집중도, 서비스업 비중 등이라고 보고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은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시기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진다고 봄

3) 조인숙(2014), 강원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2발표논문

-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의 경우 노동 대체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가 증가할수록 취업자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생산성 역시 기술 도입을 통해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함
- 서옥순(2014)⁴⁾은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요인을 노동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남성 비중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수요 측면에서 지역내총생산량이 클수록 일자리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대기업은 고용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주수현(2013)⁵⁾은 부산시의 고용 구조를 산업성장과 노동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⁶⁾하였는데, 서비스업은 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고용 증가 기여도가 높고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다만 제조업 중에서 주력 제조업이 경우 산업 성장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능가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노동 시장 행태 분석

- 산업 성장에 따른 노동 수요 증가는 단순히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동 수요자인 기

4) 서옥순(2014),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간의 관계분석 및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5) 주수현(2013), 부산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BDI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6)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는 생산액이 증가함에 따른 신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생산성이 증대될 경우에는 동일한 생산액에 필요한 필요 고용 인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체 고용 규모는 감소

업과 노동 공급자인 개인간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취업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 구인구직 활동과 취업과 취업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구인자들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그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적인 고용 정책을 펼쳐야 됨
- 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자는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옮겨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내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취업자들의 취업 경로 분석을 통해 지역간 노동시장 영향력을 분석해야 함
-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취업 이동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자리 공급 증가나 질적 향상 등의 취업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학 경쟁력이 약할수록 인력 유출이 더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인구직 활동과 취업과의 관계

- 양준석(2009)⁷⁾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15개 시도의 노동시장의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의 채용 기회가 구직자의 취업 기회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지역간 비교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 매칭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간 효과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구직자 수가 적을수록, 공석수가 많을수록 즉, 일자리 경쟁이 낮아질수록 지역내 구직자의 취업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준석(2009)의 연구는 하나의 일자리결합함수에 지역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15개 시도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반면, 남병탁(2014)⁸⁾은 1996년 1

7) 양준석(2009), 우리나라의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의 추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7년간의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을 수도권, 대경권, 동남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함

- 남병탁(2014)은 양준석(2009)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구인 탄력성이 구직 탄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일자리결합함수의 존재 여부와 탄력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노동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구인 탄력성이 구직 탄력성보다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인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직자 지원정책보다 취업률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이에 반해 이상일(2014)⁹⁾은 경남 시군의 일자리 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노동 시장은 노동 공급 측면이 노동 수요 측면보다 실제 취업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 조건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구직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취업 경로

- 심재현(2012)¹⁰⁾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대졸자들의 취업 이동 행태를 분석 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은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 수도권으로 취업 이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수도권 대학 졸업자 역시 수도권에 잔류하는 경향이 강해 비수도권에

8) 남병탁(2014), 지역별 일자리 매칭함수 탄력성 비교,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9) 이상일(2014), 경남 지역의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시군 패널자료 분석,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10) 심재현(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75권

서 일자리 공급 증가나 질적 향상 등의 취업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송부용(2013)¹¹⁾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와 교육통계서비스의 취업통계자료 등을 통해 경남지역 대졸자들의 취업 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의 대학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44%이며 나머지는 타 지역 출신 대졸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남지역 대졸자의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약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 각 지역마다 노동 시장의 주요 이슈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¹²⁾를 해소하는 것에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노동 수요의 불일치에서 찾는 경향이 강함
-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노동 수요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노동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는 노동의 수급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라는 하지만, 산업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 시장내에서 취업 이동 마찰에 의해 발생함
-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정섭(2011)¹³⁾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고용조건별로 상이한 노동 수요-공급간의 수급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각 고용조건별로 지역

11) 송부용(2013), 경남지역 대졸자의 취업 현황과 경로 분석, 정책포커스(경남발전연구원)

12)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인해 지역내 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지역민은 취업할 기업이 없다는 이중적인 불평들이 나오고 있으며, 각자 조건이 맞는 취업 환경을 찾아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발생함

13) 이정섭(2011),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불일치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간 수급불일치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지역간 수급불일치 정도의 차이가 노동력 이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 공덕암(2012)¹⁴⁾ 역시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간의 불일치라고 보고 경상남도의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을 계산하고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세를 통해 계층별 고용 대책을 제안함
- 김을식(2013)¹⁵⁾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유형을 노동수요 부족, 구조적 미스매치, 마찰적 미스매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광역경제권 및 시도별 분석을 한 결과,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미스매치는 광역경제권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시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대전, 강원, 부산, 서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적 미스매치는 충청권과 동남권, 경남, 충남, 울산, 충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마찰적 미스매치는 동남권과 울산, 경남, 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에 따라 고용정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미스매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조적 미스매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직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마찰적 미스매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용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고용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함
- 최창곤(2013)¹⁶⁾은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균형을 갖기 위해 발생하는 실업자의 수와 일자리결합함수를 통해 구조적인 수급불일치가 전체 실업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하여 직종별,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수준별 미스매치 정도를 측정함
- 그 결과, 학력별 미스매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연령별, 직종별, 지역별 미스매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14) 공덕암(2012), 경남지역 고용현황과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5호

15) 김을식(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16) 최창곤(2013),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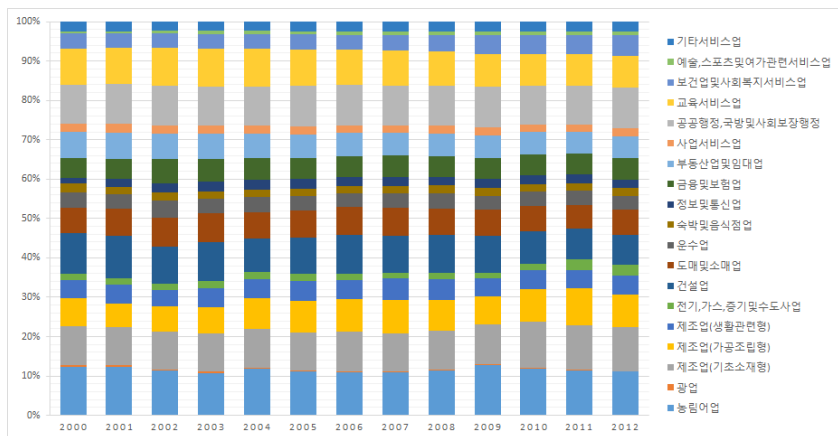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

- 제 1 절 산업 구조 변화 분석
- 제 2 절 지역 경제 성장 유형 분석
- 제 3 절 성장요인 변화 분석
- 제 4 절 시사점

제 3 장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

제 1 절 산업 구조 변화 분석

- 전라북도 산업별 생산액 추이를 보면 2013년 전체 생산액(GRDP에서 순생 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2000년에 비해 43.5% 성장하였고 연 평균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2010년 기준가격 기준)
- 2013년 기준 산업별 생산 비중을 볼 때,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 (기초소재형)으로 전라북도 전체 산업의 1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림어업 11.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7%, 제조업 (가공조립형) 8.31%, 교육서비스업 8.17% 순임
- 2000년 이후로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높 았던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7%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1.26%p, 제조업(가공조립형) 1.23%p, 제조업(기초소재형) 1.22%p 순임
- 이에 반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은 건설업 2.59%p, 농림어업 1.24%p,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0%p, 교육서비스업 0.95%p, 운수업 0.37%p 순임



[그림 3-1] 전라북도 산업별 생산액 비중 추이

- 지금까지 농림어업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기초소재형과 가공조립형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산업별 지역 특화도(LQ)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업의 경우, 전라북도 산업 중에서 특화도가 2.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과 비교할 경우 0.36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특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제조업 전체의 특화도를 측정할 경우 0.93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특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7년과 비교할 때 0.12 상승하고 있어 점점 경쟁력을 갖추어 전국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조업 중에서 식품산업(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특화도가 2.34와 2.44로 각각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업이며, 2007년과 비교할 경우 식료품 제조업은 0.16 상승하였으나, 음료 제조업은 0.22 감소함¹⁷⁾
- 전라북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섬유산업의 경우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에 속하는데, 이 산업의 2013년도 특화도는 1.89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특화도가 4번째로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또 하나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2013년 특화도는 1.86으로 이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7년 특화도와 비교할 때 0.09 상승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특화도가 강화되고 있는 산업임
-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환경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가 타 지역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낮음

17) 음료 제조업의 경우 특화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특화지수가 1을 상회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특화가 되어 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민선 6기에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산업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의 특화도는 1.02와 0.96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쳐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는 종사자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과 관련한 경쟁력을 뜻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군의 인력 양성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함
- 민선 6기 출범 이후 산업 구조는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토탈관광화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노동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역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 육성 및 고용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하지만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성장 트렌드와 함께 지역 경쟁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함
- 따라서 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총생산,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지표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기여도와 고용 기여도로 분해, 검토하고 전라북도내 산업 성장의 요인을 파악한 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를 통해 향후 산업 발전 전망을 하고자 함

[표 3-1] 산업별 특화도 변화 추이(2007년~2013년)

산업 구분	LQ		변동폭	산업구분	LQ		변동폭
	2007년	2013년			2007년	2013년	
농업, 임업 및 어업	2.30	2.66	0.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8	0.59	0.21
광업	1.16	1.77	0.6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7	1.86	0.09
식료품 제조업	2.17	2.34	0.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8	0.47	0.39
음료 제조업	2.67	2.44	-0.22	가구 제조업	0.50	0.72	0.21
담배 제조업	0.92	0.00	-0.92	기타 제품 제조업	0.94	0.83	-0.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64	0.78	0.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9	1.23	0.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80	0.90	0.0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2	1.40	0.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3	0.13	0.00	건설업	0.94	1.07	0.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93	1.59	-0.34	도매 및 소매업	1.05	0.99	-0.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6	1.34	-0.02	운수업	0.93	0.94	0.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8	0.36	-0.02	숙박 및 음식점업	1.03	1.02	-0.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32	0.42	0.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8	0.43	-0.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9	1.85	0.36	금융 및 보험업	1.09	1.05	-0.04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84	0.84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81	0.82	0.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48	0.48	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46	0.45	-0.0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6	1.89	0.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58	0.68	0.10
1차 금속 제조업	0.71	1.03	0.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8	1.39	-0.1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48	0.64	0.16	교육 서비스업	1.24	1.22	-0.0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27	0.31	0.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1.37	-0.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22	0.23	0.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8	0.96	-0.02
전기장비 제조업	0.32	0.50	0.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8	1.19	-0.09

제 2 절 지역 경제 성장 유형 분석

1. 분석 방법론

- 지역 경제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GRDP 성장률이나 사업체별 종사자수의 증가율 등임
- 하지만 위의 지표들은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에 지역간 비교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유리한 지표임
- 따라서 지역간 비교시에 적절한 지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라고 판단됨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경제성장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음

$$\frac{GRDP_i}{P_i} = \frac{GRDP_i}{L_i} \times \frac{L_i}{N_i} \times \frac{N_i}{P_i}$$

P_i : 인구, L_i : 취업자수, N_i : 생산가능인구

$\frac{GRDP_i}{L_i}$: 노동생산성, $\frac{L_i}{N_i}$: 고용률, $\frac{N_i}{P_i}$: 생산가능인구 비율

-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생산성과 고용률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공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경제성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지표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 시장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어 신규 투자 혹은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위 식을 편미분할 경우, 1인당 GRDP의 변화율은 노동생산성의 변화율과 고용률의 변화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변화율의 합과 같아짐¹⁸⁾

18) $A = B \times C \times D$ 식의 경우 양변을 로그로 치환하면 $\ln A = \ln B + \ln C + \ln D$ 로 바뀌게 되며, 양변을 편미분하면 $\frac{dA}{A} = \frac{dB}{B} + \frac{dC}{C} + \frac{dD}{D}$ 가 되며 각 항은 해당 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함

-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GRDP의 증가에 기여하는 세 요인 중에서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됨
- 지역경제 발전이 위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은 서로 상충되는 경향¹⁹⁾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이 높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률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성장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고용탄력성과 취업계수임
- 고용탄력성의 경우 지역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률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text{고용탄력성} = \text{취업자 증가율} / \text{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 만약 고용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고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경제 성장 속도가 취업자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다른 지표인 취업계수는 일정기간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지역내 총생산 단위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text{취업계수} = \text{취업자수} / \text{지역내 총생산}$$

19) 조인숙(2014)의 여러 연구 문헌에서 노동생산성과 취업률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취업계수 값이 높은 지역은 같은 단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분석 결과

■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1인당 GRDP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3.42%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연 평균 6.02% 성장하였으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2.10% 성장에 그침
- 전라북도의 1인당 GRDP 증가율은 3.3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2.62%이었으며 동기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연평균 5.02% 증가하였으나, 대전광역시는 연평균 1.15% 증가하는데 그쳐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임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용률 변화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0.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0.50% 증가한 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오히려 0.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0.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0.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볼 경우 광주광역시가 연평균 0.86%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

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라남도도 0.35%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적게 증가하는 지역임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0.58%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율 분석 결과(2000년~2013년)

(단위 : %)

	1인당 GRDP	노동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비율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전국	3.42	2.62	76.70	0.14	4.14	0.64	18.67
서울	2.89	2.07	71.56	0.21	7.19	0.60	20.81
부산	3.34	2.70	80.81	0.06	1.93	0.56	16.84
대구	2.85	2.07	72.59	0.23	8.01	0.54	18.97
인천	3.02	1.86	61.51	0.37	12.46	0.76	25.54
광주	3.13	1.74	55.70	0.50	16.13	0.86	27.66
대전	2.24	1.15	51.49	0.39	17.55	0.68	30.61
울산	2.10	1.19	56.59	0.15	7.18	0.75	35.91
경기	3.47	2.63	75.79	0.03	0.98	0.79	22.75
강원	2.85	2.44	85.62	-0.16	-5.80	0.57	19.92
충북	4.12	3.28	79.58	0.26	6.27	0.56	13.60
충남	6.02	5.02	83.49	0.21	3.57	0.73	12.25
전북	3.32	2.50	75.28	0.22	6.79	0.58	17.45
전남	3.70	3.37	91.15	-0.03	-0.92	0.35	9.50
경북	4.34	3.94	90.89	-0.15	-3.50	0.53	12.32
경남	3.89	3.09	79.57	0.13	3.43	0.64	16.50
제주	3.27	2.76	84.21	-0.01	-0.21	0.51	15.64

[표 3-3] 지역별 지역경제 성장기여 요인 순위 비교(2000년~2013년)

	1인당 GRDP	노동생산성		고용률		노동시장비율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연평균 성장률	성장 기여율
서울	12	11	12	8	5	8	6
부산	7	7	6	11	11	11	10
대구	14	12	11	5	4	13	8
인천	11	13	13	3	3	3	4
광주	10	14	15	1	2	1	3
대전	15	16	16	2	1	6	2
울산	16	15	14	9	6	4	1
경기	6	8	9	12	12	2	5
강원	13	10	3	16	16	10	7
충북	3	4	7	4	8	12	13
충남	1	1	5	7	9	5	15
전북	8	9	10	6	7	9	9
전남	5	3	1	14	14	16	16
경북	2	2	2	15	15	14	14
경남	4	5	8	10	10	7	11
제주	9	6	4	13	13	15	12

- 각 요소의 1인당 GRDP 성장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볼 경우 노동생산성이 76.7%, 고용률이 4.14%,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8.7%를 차지하여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지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1인당 GRDP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전체 일자리 총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의 지역간 요인 비교를 할 경우, 대체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용률의 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보다는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률 향상이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도 단위의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적효과 및 기술력 향상에 의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1인당 GR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도 단위의 경향과 다르게, 노동생산성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보다는 고용률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지 못한 영향이 크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개인 지원형 서비스업보다 기업 지원형 서비스 등의 제조업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함

■ 지역 경제 고용 창출 능력 분석

- 2000년 이후 고용 탄력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0.3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1% 이루어졌을 때 취업자 수는 0.33%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고용탄력성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지역별 변동 추이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고용탄력성이 0.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0.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고용탄력성의 편차는 2000년대 초반에 0.30에서 2010년 초반은 0.43으로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역간 고용 시장 환경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는 고용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1.13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여 고용 시장이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3-4] 지역별 고용탄력성 비교(2000년~2013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2000~2013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고용탄력성	순위
전국	0.34		0.21		0.60		0.33	
서울	0.29	8	0.07	9	0.54	9	0.25	11
부산	-0.03	14	-0.29	15	0.65	8	0.02	15
대구	0.57	4	-0.09	14	0.21	16	0.25	10
인천	0.33	7	0.46	3	1.92	1	0.53	4
광주	0.52	5	0.39	5	0.78	5	0.52	5
대전	0.61	2	0.56	2	0.75	6	0.61	1
울산	0.58	3	1.07	1	0.23	15	0.59	2
경기	0.65	1	0.40	4	0.49	12	0.53	3
강원	0.04	12	-0.03	12	0.52	10	0.12	12
충북	0.14	10	0.31	6	0.33	13	0.26	9
충남	0.11	11	0.14	8	0.94	4	0.27	8
전북	-0.15	15	-0.07	13	1.13	2	0.11	13
전남	-0.33	16	-0.30	16	0.75	7	-0.19	16
경북	-0.01	13	-0.01	10	0.29	14	0.03	14
경남	0.29	9	0.16	7	0.98	3	0.30	7
제주	0.41	6	-0.02	11	0.49	11	0.30	6

[표 3-5] 지역별 고용계수 비교(2000년~2013년)

(단위 : 명/10억원)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2000~2013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고용계수	순위
전국	23.56		20.29		18.49		20.87	
서울	20.26	13	17.96	13	16.74	12	18.42	13
부산	30.71	3	26.22	5	24.33	5	27.32	3
대구	35.60	1	31.93	1	29.19	1	32.42	1
인천	26.22	9	23.01	9	22.31	6	23.96	8
광주	29.61	4	26.41	4	24.78	4	27.03	4
대전	28.47	6	26.80	3	25.05	2	26.95	5
울산	8.96	16	8.50	16	8.12	16	8.56	16
경기	26.38	8	23.20	8	20.84	9	23.44	9
강원	27.14	7	23.57	7	21.40	8	24.20	7
충북	23.71	10	20.22	10	17.70	10	20.57	10
충남	18.49	15	13.63	15	11.51	15	14.40	15
전북	28.65	5	24.42	6	22.28	7	25.33	6
전남	20.23	14	16.55	14	14.59	14	17.33	14
경북	23.40	12	18.34	12	16.41	13	19.49	12
경남	23.55	11	19.35	11	17.55	11	20.20	11
제주	31.36	2	28.56	2	24.96	3	28.47	2

- 2000년 이후 평균 고용계수는 20.87로 이는 10억원의 생산 활동에 20.8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어 노동을 절약하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볼 때에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고용계수는 25.33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간 비교시 6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이를 단순히 해석하면 전라북도의 산업이 고용창출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선 고용탄력성 분석 결과와 같이 고려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 고용탄력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계수가 높다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형 산업이지만, 신규 고용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조인숙(2014)²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 및 고용계수를 비교한 결과, 제조업은 고용탄력성이 낮은 반면, 고용계수는 높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오히려 서비스업의 고용계수가 더 커지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6] 산업별 고용탄력성 및 고용계수

산업 구분	고용탄력성 (2000~2010)	고용계수		
		2000	2005	201
전체	0.654	14.9	13.4	13.0
제조업	0.016	19.9	15.3	10.9
서비스업	1.100	16.2	15.4	16.7
유통서비스업	0.728	19.1	16.3	17.4
생산자서비스업	1.488	12.0	12.6	14.0
사회서비스업	1.887	9.6	10.6	12.4
개인서비스업	0.397	46.6	44.4	38.5

출처 : 조인숙(2014)

20) 조인숙(2014), 강원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2발표논문

-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유통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음
- 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라북도의 낮은 고용탄력성과 높은 고용 계수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앞선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

제 3 절 성장요인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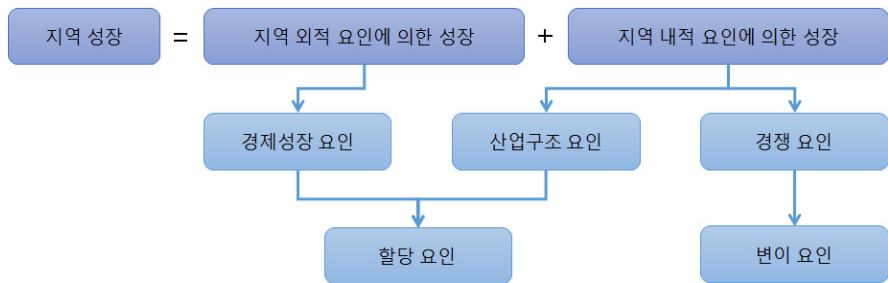
1. 분석 방법론

- 지역 산업의 성장요인은 크게 지역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요인은 전국의 경제 성장²¹⁾과 같이 지역 밖에서 지역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내적 요인은 지역 내부 구조의 특징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생산 환경을 의미함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 경제 성장요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 지역의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성장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의 성장은 지역 산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산업 성장 요인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함²²⁾
 - 전국 경제 성장 요인(National Growth Component) : 전국의 경제 성장이 지역 경제 및 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한 지역산업 또는 소득·고용 성장이 국가 전체의 성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함

21) 전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외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됨

22) 김홍배(2007),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산업구조 요인(Industry-Mixed Component) : 특정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이 지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만약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이 요인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그 지역 산업은 모든 산업의 전국적인 평균 성장률보다 앞서는 성장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경쟁 요인(Competition Component) : 지역의 생산 환경의 특징²³⁾으로 인한 지역 성장 요인으로 타지역과 대비한 경쟁적 위치를 의미하며, 만약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지역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3-2]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출처 : 김홍배(2007)

-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구하는 총성장효과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총성장효과 =

$$E_{ij}(t_0) \times \frac{E(t_1) - E(t_0)}{E(t_0)} + E_{ij}(t_0) \times \left[\frac{E_i(t_1)}{E_i(t_0)} - \frac{E(t_1)}{E(t_0)} \right] + E_{ij}(t_0) \times \left[\frac{E_{ij}(t_1)}{E_{ij}(t_0)} - \frac{E_i(t_1)}{E_i(t_0)} \right]$$

E_{ij} : j 지역 i 산업의 종사자수, E_j : j 지역 총 종사자수

E_i : 전국 i 산업의 종사자수, E : 전국 총 종사자수

t_1 : 비교시점, t_0 : 기준시점

- 우변의 각 항은 전국 경제 성장 요인, 산업구조 요인, 경쟁요인을 의미함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의 성장효과를 요인별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종사자수의 증가분을 절대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 산업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23) 시장 입지, 운송 편의, 인구 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 및 지자체의 산업육성정책 등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별 기여도를 성장률로 표시하는 형식으로 보완된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모형이 제시됨
- 이 모형은 변이할당분석의 확장 모형으로 이 모형의 기본식은 지역의 총성장률시차는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실질 성장률과 전국 특정산업의 성장률 차이로 계산됨
- 이 성장률시차는 다시 경쟁력요인과 가중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력요인은 변이할당분석의 경쟁 요인으로 설명되고 가중요인은 산업구조 요인으로 설명됨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모형의 식은 다음과 표현할 수 있음

$$TR_{ij} = GR_{ij}(t_0, t_1) - GR_i(t_0, t_1) = WP + RP$$

$$GR_{ij}(t_0, t_1) = \frac{E_{ij}(t_1) - E_{ij}(t_0)}{E_j(t_0)}$$

$$WP = \left[\frac{E_{ij}(t_1)}{E_j(t_0)} - \frac{E_i(t_0)}{E(t_0)} \right] \times \left[\frac{E_i(t_1) - E_i(t_0)}{E_i(t_0)} \right]$$

$$RP = \left[\frac{E_{ij}(t_1) - E_{ij}(t_0)}{E_j(t_0)} - \frac{E_i(t_1) - E_i(t_0)}{E_i(t_0)} \right] \times \frac{E_{ij}(t_0)}{E_j(t_0)}$$

TR_{ij} : j 지역 i 산업 성장률총시차

GR_{ij} : j 지역 i 산업 실질 성장률, GR_i : 전국 i 산업 실질성장률

WP : 가중요인, RP : 경쟁력요인

E_{ij} : j 지역 i 산업의 종사자수, E_j : j 지역 총 종사자수

E_i : 전국 i 산업의 종사자수, E : 전국 총 종사자수

t_1 : 비교시점, t_0 : 기준시점

- 위 식에서 가중요인(WP)의 값이 양(+)이면 해당 산업의 지역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서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절대값이 커질 수록 전국적인 성장의 영향으로 지역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경쟁력요인(RP)의 값이 양(+)이면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만약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면 그 지역의 산업은 지역 경제 및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며, 그 값이 클수록 기여도 역시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점은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강승호(2014)²⁴)에 따르면,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을 통해 계산되는 총시차,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의 부호에 따라서 산업군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군에 맞는 산업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함
- 만약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면서 그 값이 클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성장 속도가 크고 해당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가중요인은 음(-)의 값을 갖지만 경쟁력요인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큰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반대로 경쟁력요인은 음(-)의 값을 가지지만 가중요인이 이를 능가하여 총시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산업은 비록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잠재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함
- 총시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산업의 경우에는 정채산업과 사양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산업군 중에서 경쟁력요인이 양(+)의 값을 가지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향후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리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음

24) 강승호(2014), 강원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3발표논문

[표 3-7]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에 의한 산업 성장 기여도 분류

산업 구분	총시차(TR)	가중요인(WP)	경쟁력요인(RP)
성장산업	+	+	+
경쟁산업	+	-	+
잠재산업	+	+	-
정체산업	-	+	-
		-	+
사양산업	-	-	-

출처 : 강승호(2014)

2. 분석 결과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의 산업별 지역 실질 성장률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무려 435.31%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9.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산업별 실질 성장률의 경우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325.59%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에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이 -4.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실질 성장률에서 국내 실질 성장률을 뺀 총시차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9.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86.6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총시차가 (+)의 값을 가지는 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건설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교육 서비스업 등 전체 42개의 산업군 중 27개의 산업임

[표 3-8]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2007년~2013년)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 성장률	국내 실질 성장률	총시차	산업 구분	지역 실질 성장률	국내 실질 성장률	총시차
농업, 임업 및 어업	10.93	0.55	10.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72	47.60	32.12
광업	5.34	-1.19	6.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0.33	32.48	57.85
식품품 제조업	76.22	14.90	61.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6.45	21.72	24.73
음료 제조업	-1.97	-0.19	-1.78	가구 제조업	11.35	2.76	8.59
담배 제조업	-1.45	-0.33	-1.12	기타 제품 제조업	-1.63	1.82	-3.4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99	-0.04	15.0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32	-0.21	3.5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19	-4.93	12.1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43	10.02	9.4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36	1.51	-1.15	건설업	218.13	116.52	101.6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22	-0.96	-7.26	도매 및 소매업	189.76	228.51	-38.7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27	4.47	2.80	운수업	103.89	82.51	21.3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9	-3.37	1.78	숙박 및 음식점업	204.50	172.40	32.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64	-0.38	1.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12	63.44	-72.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5.76	18.08	47.68	금융 및 보험업	38.61	38.82	-0.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7	1.94	0.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38	24.93	6.4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36	30.91	-12.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50	166.16	-86.6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43	2.64	8.7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7.27	198.40	-11.13
1차 금속 제조업	48.28	17.46	30.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38	53.12	-26.7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8.21	41.88	26.34	교육 서비스업	170.27	125.24	45.0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6	25.20	-3.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5.31	325.59	109.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30	17.71	-12.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29	35.25	2.04
전기장비 제조업	32.55	20.26	12.30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37	92.57	-6.20

- 이 기간을 2년씩 나누어 기간별로 실질 성장률과 총시차의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총시차가 양(+)의 값을 가지는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이 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모든 기간에서 총시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 산업들은 지속적인 열위산업²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총시차가 음(-)에서 양(+)의 값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이 산업군은 성장 가능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총시차가 양(+)에서 음(-)의 값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이 산업군은 침체 가능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총시차는 해당 산업의 규모를 가중치로 반영한 지역과 전국의 실질성장률 차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시차의 부호에 따라 지역내 산업 비중 및 성장속도를 판단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지역 특화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성장 추세에 따른 산업 성장으로 지역내 산업 비중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총시차를 가중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분해함

25) 열위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해당 산업이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전국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갖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임

[표 3-9]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1,2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성장률			국내 실질성장률			총시차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농업, 임업 및 어업	-6.35	10.41	5.18	-2.69	1.66	1.31	-3.66	8.75	3.87
광업	3.40	-0.83	2.44	-0.39	-0.70	-0.05	3.79	-0.12	2.49
식료품 제조업	6.21	26.03	36.12	0.18	7.53	5.97	6.03	18.50	30.15
음료 제조업	2.99	-3.03	-1.45	-0.53	0.13	0.18	3.52	-3.16	-1.62
담배 제조업	-1.45	0.00	0.00	-0.03	-0.15	-0.13	-1.42	0.00	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70	0.92	12.70	-6.88	4.00	2.31	6.19	-3.08	10.3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11	1.69	1.94	-5.03	1.69	-1.49	8.13	0.00	3.4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9	-0.02	1.36	-1.70	1.48	1.45	0.51	-1.50	-0.0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5.00	-0.99	-1.86	-1.76	-0.21	0.90	-3.24	-0.78	-2.7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04	3.51	6.49	-1.62	2.35	3.18	-2.42	1.16	3.3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2	0.40	-1.48	-3.29	-0.56	0.45	2.97	0.97	-1.9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78	0.59	0.67	-0.10	0.79	-0.97	-0.67	-0.20	1.6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5.10	22.22	5.68	0.97	9.85	5.93	34.13	12.37	-0.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4	3.64	-1.41	-0.35	0.98	1.11	0.31	2.65	-2.5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6	16.31	0.72	1.12	13.37	13.83	-1.28	2.94	-13.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2	3.25	3.87	0.28	-1.69	3.64	3.14	4.94	0.23
1차 금속 제조업	23.71	7.40	14.30	1.33	10.83	4.14	22.38	-3.43	10.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5.74	23.34	6.20	4.02	21.31	13.55	31.72	2.04	-7.3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1	2.55	13.56	-16.37	29.58	9.13	19.47	-27.03	4.4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0	2.09	3.48	-1.07	10.16	7.10	0.07	-8.06	-3.63
전기장비 제조업	7.33	12.62	9.98	-0.10	11.79	6.97	7.42	0.82	3.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46	35.37	17.21	-3.43	31.82	15.39	24.89	3.55	1.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85	45.95	45.26	-14.25	26.18	16.85	2.40	19.78	28.4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7.08	8.61	8.67	9.76	5.23	5.68	17.31	3.39	2.99
가구 제조업	4.78	3.21	2.67	-0.74	1.11	2.06	5.52	2.11	0.61
기타 제품 제조업	-1.41	1.67	-1.76	-1.52	1.61	1.44	0.11	0.06	-3.20

[표 3-10] 기간별 산업별 실질성장률 차이 변화 추이(3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지역 실질성장률			국내 실질성장률			총시차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07~2009	2009~2011	2011~20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37	0.44	-10.82	-0.61	-0.16	0.50	15.98	0.60	-11.3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85	5.29	6.78	2.29	3.15	3.89	3.57	2.14	2.89
건설업	101.64	61.27	43.28	25.13	131.37	-41.58	76.51	-70.09	84.86
도매 및 소매업	30.10	47.70	93.31	69.44	32.06	110.37	-39.33	15.64	-17.07
운수업	62.08	-20.11	54.98	56.67	13.29	10.41	5.41	-33.40	44.57
숙박 및 음식점업	49.60	51.74	85.41	25.78	48.95	83.70	23.81	2.79	1.7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2	8.32	-8.91	8.82	30.50	19.79	-16.64	-22.18	-28.70
금융 및 보험업	26.98	19.78	-8.48	27.53	21.42	-9.97	-0.56	-1.64	1.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68	27.84	12.85	10.79	3.85	8.87	-24.47	23.99	3.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00	15.78	31.46	82.54	48.93	28.20	-56.54	-33.16	3.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6.82	52.20	55.21	42.31	68.91	73.50	24.51	-16.71	-18.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13	4.74	-41.39	62.08	-13.12	4.30	7.05	17.86	-45.69
교육 서비스업	94.49	19.28	47.43	41.17	43.82	33.35	53.32	-24.53	14.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3.47	103.92	146.24	103.78	97.13	105.18	49.69	6.79	41.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97	-2.63	17.43	11.90	6.64	14.40	8.07	-9.26	3.03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9	50.31	29.93	22.95	31.36	32.20	-25.74	18.94	-2.27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의 산업별 총시차를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가중 요인이 가장 높게 발생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경쟁력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총시차가 전북 산업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는 지역의 경쟁력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전국적인 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타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산업 구조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총시차는 음(-)의 값을 가짐
- 가중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19개 산업임
- 경쟁력 요인이 양(+)의 값을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31개 산업임
-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산업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값이 클수록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산업군은 총 12개 산업으로 대표적인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임
- 이 기간을 2년씩 나누어 기간별로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의 변동 추이를 보면, 두 요인이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는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두 요인 모두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는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 산업들은 전국적인 성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11]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2007~2013년)

(단위 : %)

산업 구분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력 요인	산업 구분	총시차	가중 요인	경쟁력 요인
농업, 임업 및 어업	10.38	0.72	9.6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12	-29.73	61.85
광업	6.52	-0.19	6.7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7.85	25.10	32.75
식료품 제조업	61.31	17.47	43.8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73	-19.90	44.63
음료 제조업	-1.78	-0.32	-1.47	가구 제조업	8.59	-1.37	9.96
담배 제조업	-1.12	0.03	-1.15	기타 제품 제조업	-3.45	-0.10	-3.3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5.04	0.02	15.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4	-0.04	3.5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12	0.96	11.1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41	3.20	6.2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5	-1.31	0.16	건설업	101.61	-6.82	108.4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7.26	-0.90	-6.36	도매 및 소매업	-38.75	12.28	-51.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80	1.60	1.19	운수업	21.38	-5.67	27.0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8	2.09	-0.31	숙박 및 음식점업	32.10	5.53	26.56
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1	0.26	0.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2.56	-26.49	-46.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7.68	8.88	38.80	금융 및 보험업	-0.21	3.61	-3.8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33	-0.32	0.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5	-4.76	11.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55	-16.18	3.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6.66	-89.79	3.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79	2.28	6.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13	-83.75	72.63
1차 금속 제조업	30.82	-5.13	35.9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74	30.88	-57.6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34	-21.59	47.92	교육 서비스업	45.03	30.30	14.7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63	-18.50	14.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72	153.83	-44.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41	-13.79	1.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4	-0.59	2.63
전기장비 제조업	12.30	-13.72	26.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0	25.97	-32.17

[표 3-12] 산업별 성장을 시차 분석 결과(1,2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총시차			가중요인			경쟁력요인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농업, 임업 및 어업	-3.66	8.75	3.87	-3.51	2.05	2.11	-0.15	6.71	1.76
광업	3.79	-0.12	2.49	-0.06	-0.33	-0.03	3.85	0.21	2.52
식료품 제조업	6.03	18.50	30.15	0.21	8.64	7.32	5.82	9.85	22.82
음료 제조업	3.52	-3.16	-1.62	-0.88	0.27	0.30	4.40	-3.43	-1.92
담배 제조업	-1.42	0.00	0.00	0.00	0.15	0.13	-1.43	-0.15	-0.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19	-3.08	10.39	2.47	-1.34	-0.81	3.72	-1.74	11.1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13	0.00	3.43	0.98	-0.24	0.19	7.15	0.24	3.2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51	-1.50	-0.09	1.48	-1.36	-1.34	-0.97	-0.14	1.2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24	-0.78	-2.76	-1.64	-0.17	0.71	-1.60	-0.60	-3.4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2	1.16	3.31	-0.58	0.65	0.96	-1.84	0.51	2.3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7	0.97	-1.93	2.04	0.34	-0.27	0.93	0.62	-1.6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67	-0.20	1.64	0.07	-0.62	0.71	-0.74	0.42	0.9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4.13	12.37	-0.25	0.47	8.74	5.62	33.66	3.63	-5.8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31	2.65	-2.52	0.06	-0.17	-0.02	0.26	2.83	-2.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8	2.94	-13.10	-0.58	-7.23	-6.44	-0.69	10.18	-6.6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4	4.94	0.23	0.24	-1.44	3.56	2.90	6.38	-3.33
1차 금속 제조업	22.38	-3.43	10.16	-0.39	-0.53	-0.31	22.77	-2.89	10.4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1.72	2.04	-7.36	-2.07	-8.20	-4.57	33.79	10.24	-2.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47	-27.03	4.43	12.02	-21.02	-6.68	7.46	-6.01	11.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7	-8.06	-3.63	0.83	-8.12	-5.66	-0.76	0.06	2.03
전기장비 제조업	7.42	0.82	3.01	0.07	-7.37	-3.86	7.36	8.19	6.8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89	3.55	1.82	2.14	-16.90	-6.76	22.75	20.45	8.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0	19.78	28.41	-11.01	21.06	13.68	13.42	-1.28	14.7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31	3.39	2.99	-8.95	-3.44	-3.33	26.26	6.83	6.32
가구 제조업	5.52	2.11	0.61	0.37	-0.42	-0.63	5.15	2.53	1.24
기타 제품 제조업	0.11	0.06	-3.20	0.09	-0.13	-0.10	0.02	0.19	-3.10

[표 3-13] 산업별 성장률 시차 분석 결과(3차 산업)

(단위 : %)

산업 구분	총시차			가중요인			경쟁력요인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07~2009	2009~2011	2011~2013	2007~2009	2009~2011	2011~20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98	0.60	-11.32	-0.11	-0.08	0.28	16.09	0.68	-11.6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57	2.14	2.89	0.73	1.10	1.50	2.84	1.04	1.39
건설업	76.51	-70.09	84.86	-1.47	6.74	2.37	77.98	-76.84	82.49
도매 및 소매업	-39.33	15.64	-17.07	3.73	0.00	1.97	-43.07	15.64	-19.04
운수업	5.41	-33.40	44.57	-3.89	-1.05	-1.32	9.30	-32.35	45.89
숙박 및 음식점업	23.81	2.79	1.71	0.83	1.20	2.87	22.99	1.58	-1.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64	-22.18	-28.70	-3.68	-14.64	-9.94	-12.96	-7.54	-18.76
금융 및 보험업	-0.56	-1.64	1.49	2.56	1.21	-0.58	-3.11	-2.85	2.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47	23.99	3.98	-2.06	-1.12	-1.69	-22.41	25.11	5.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54	-33.16	3.26	-44.60	-28.29	-16.50	-11.94	-4.86	19.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51	-16.71	-18.29	-17.86	-23.64	-23.76	42.37	6.93	5.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05	17.86	-45.69	36.09	-6.17	2.35	-29.04	24.03	-48.04
교육 서비스업	53.32	-24.53	14.07	9.96	11.30	7.53	43.36	-35.84	6.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69	6.79	41.06	49.03	42.14	41.29	0.66	-35.35	-0.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7	-9.26	3.03	-0.20	-0.02	-0.61	8.26	-9.24	3.64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74	18.94	-2.27	6.44	5.82	7.10	-32.18	13.12	-9.37

- 산업 성장의 두 요인의 부호에 따라 산업의 성장 유형을 크게 5가지, 성장 산업, 경쟁산업, 잠재산업, 정체산업, 사양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장산업은 가중요인과 경쟁력요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이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은 12개 산업으로 대표적인 성장산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북에서 주력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산업들임

- 경쟁산업은 가중요인은 음(-)의 값을 갖지만 경쟁력요인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큰 양(+)의 값을 가질 경우로 12개 산업이 이 산업군에 속하며, 대표적인 산업으로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 잠재산업은 경쟁산업과 반대로 경쟁력요인은 음(-)의 값을 가지지만 가중요인이 이를 능가하여 총시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로 이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임
- 정체산업과 사양산업은 총시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산업들로 이 중 정책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산업²⁶⁾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표 3-14] 산업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전라북도 산업 유형 분류

산업 구분	산 업
성장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경쟁산업	광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잠재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체산업	담배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양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주) *는 정체산업이지만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

26) 경쟁력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지는 산업

제 4 절 시사점

-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고용탄력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계수가 높다는 것은 현재 지역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형 산업이지만, 신규 고용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점점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1인당 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지역 경제가 아직까지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 요인을 노동생산성과 고용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전국 평균 대비하여 노동생산성의 기여도보다는 고용률 향상에 따른 성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보다는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률 향상이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도 단위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적효과 및 기술력 향상에 의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일반적인 경향과 배치되는 결과임
- 이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낮아 기업 유치 및 생산성 증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정책과 함께 기업 지원형 서비스 등의 제조업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함
- 하지만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타 지역 대비 경쟁력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차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먼저 전라북도가 중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은 전국적인 산업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대상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 아직까지 전국적인 성장 속도를 따라 잡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 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현재 타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 전략을 펼쳐야 하며, 그 대상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의 첨단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기업지원형 서비스산업
- 현재 전라북도 민선 5기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식품산업, 탄소섬유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이 중 식품산업과 탄소섬유산업은 특화도는 높고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집중 육성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이에 반해 관광산업의 경우 특화도는 전국 평균 수준에 그쳐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 자원 개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군의 인력 양성을 통한 관광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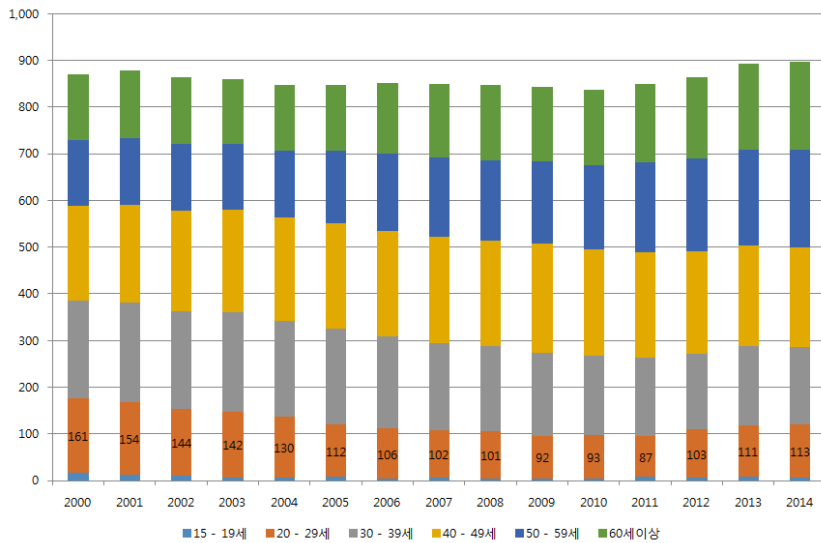
지역 고용구조 변화 분석

- 제 1 절 전라북도 노동시장 현황
- 제 2 절 노동시장 행태 분석
- 제 3 절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 제 4 절 시사점

제 4 장 지역 고용 구조 변화 분석

제 1 절 전라북도 노동시장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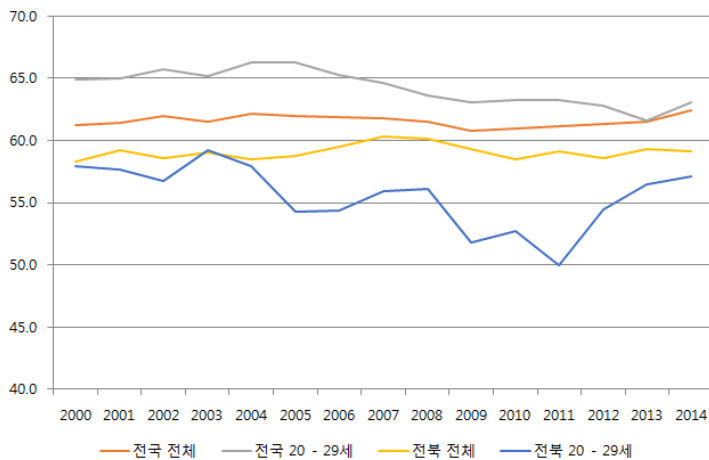
- 전라북도 2014년 경제활동인구는 897천명으로 2000년 대비하여 약 3% 증가하였으나, 청년층(20세~29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13천명으로 2000년 대비 30%가 감소함
-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18.5%에서 12.6%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음



[그림 4-1] 전라북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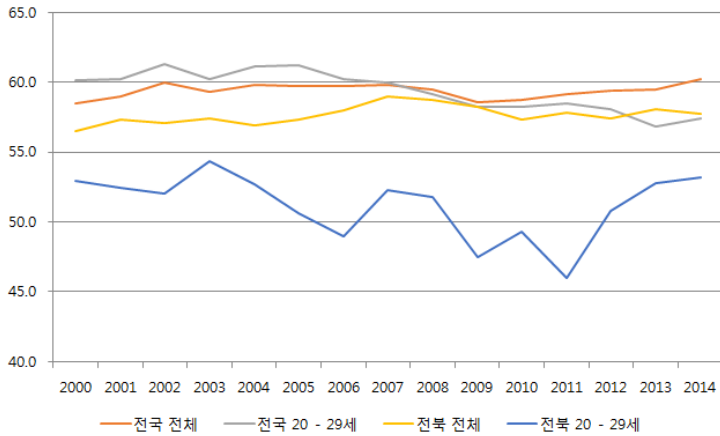
- 전국적인 경향과 비교하면,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대비하여 2010년에 약 20%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18% 감소함
- 전국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9%에서 15.0%로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비중 감소 추세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그 감소폭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인력 공급의 문제가 향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함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제 노동에 이바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 및 전라북도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전라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부터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 및 전라북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라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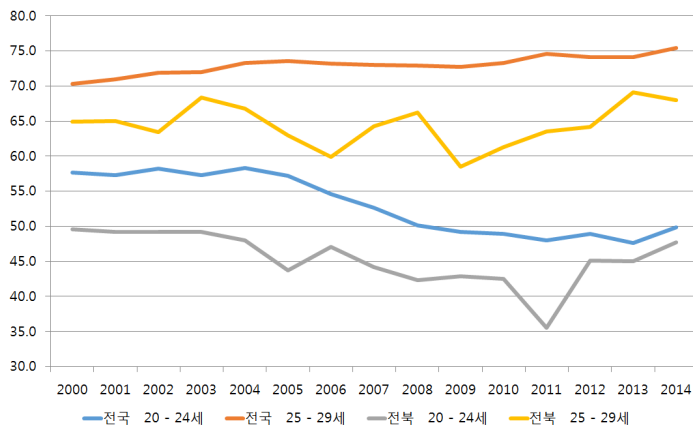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의미하는 고용률 지표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 및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라북도의 청년층의 고용률은 변동이 심한 편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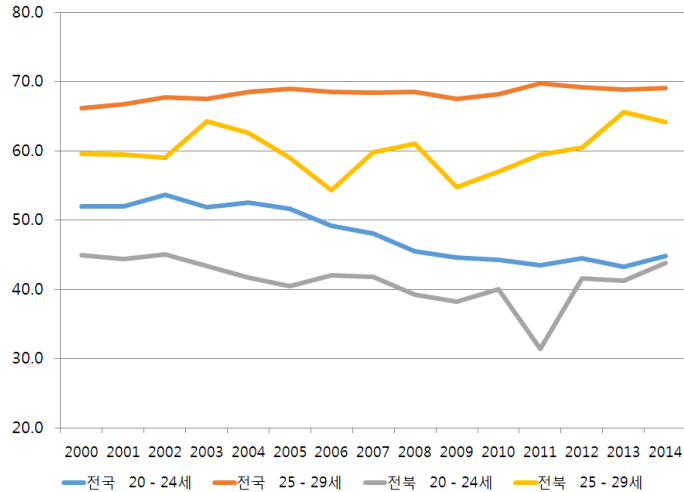
[그림 4-3] 연령별 고용률(%)

- 청년층의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볼 경우, 20~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2000년대 후반 경제적 불안에 따라 취업 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임
- 이에 반해 2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 노동 수요 부족에 따른 취업 인구가 적기 때문임



[그림 4-4]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5] 청년층 고용률(%)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경제 불안으로 인해 대학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임
- 하지만, 전라북도의 감소 추세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 2 절 노동시장 행태 분석

1. 분석 방법론

- 지역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노동시장의 취업 매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기업의 구인 활동과 개인의 구직 활동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간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 취업, 즉 일자리 매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최근 일자리결합이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몇 가지 변수들 사이의 간단한 관계로 규명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노동시장의 취업 또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기업)간의 갈등, 구직자간 및 구인자간의 경쟁과 지역간 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용이함
- 일자리결합이론의 가장 단순한 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M = A \times f(U, V)$$

M : 취업건수, A : 일자리 매칭의 전반적인 효율성

U : 구직자수(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자)

V : 구인자수(신규 일자리 + 근로자 이탈로 발생하는 대체일자리)

- 위 모형에서 구직자수와 공식수에 대한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지며 탄력성을 의미함
- 즉, 구직자수에 대한 계수값이 공식수에 대한 계수값보다 클 경우에는 구직자의 취업이 용이한 반면, 공식수에 대한 계수값이 더 클 경우에는 기업의 채용이 용이한 환경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일자리결합이론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워크넷의 구인구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하지만, 이상일(2014)²⁷⁾의 지적에 따르면, 워크넷 자료를 활용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째는 취업건수는 플로우 변수, 구직자수와 공식수는 스톡 변수를 사용하여 하지만, 워크넷 자료는 모두 플로우 값이라는 점임
- 두 번째는 취업건수와 구직자수는 구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공식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지 못함

27) 이상일(2014), 경남 지역의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시군 패널자료 분석,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일자리결합모형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 구인·구직탄력성의 크기, 지역간 외부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워크넷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워크넷 자료가 국내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으로, 워크넷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 모형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2. 일자리결합모형 분석

1) 분석 자료

- 전국 및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전체 노동시장 및 청년계층²⁸⁾ 일자리결합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²⁹⁾ 중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월별 통계자료³⁰⁾를 이용
- 해당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월 평균 약 31만명이 구직을 신청하고, 20만건의 기업 구인 신청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1만건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구직자의 약 48%가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배수 즉, 구직건수 대비 구인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취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구인배수는 58%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28) 청년계층은 20세~29세로 한정하여 자료를 정리함

29)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 자료임

30) 청년 계층의 경우 2013년도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구인연령차별금지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성별, 연령별 구인자 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통계자료를 이용

[표 3-15]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단위 : 명)

	취업건수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률	구인배수
전국	110,923	196,808	307,959	0.35	0.64
서울	19,937	29,867	62,571	0.32	0.48
부산	9,047	12,472	24,951	0.36	0.50
대구	6,035	11,174	18,018	0.33	0.63
인천	7,581	11,304	18,175	0.42	0.63
광주	3,251	5,843	10,409	0.31	0.57
대전	3,494	4,209	9,284	0.37	0.47
울산	2,640	5,422	5,947	0.45	0.94
세종	648	996	543	2.05	2.84
경기	26,965	54,332	79,389	0.33	0.70
강원	3,560	4,396	8,090	0.45	0.55
충북	4,062	7,844	9,135	0.44	0.87
충남	4,489	10,059	11,011	0.40	0.94
전북	4,428	6,454	11,546	0.39	0.58
전남	3,274	5,436	6,662	0.48	0.82
경북	5,089	9,465	14,366	0.35	0.67
경남	5,900	16,283	16,169	0.36	1.01
제주	766	1,485	1,636	0.45	0.90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0.1~2015.6)

주1) 취업률 = 취업건수/구직건수

구인배수 = 구인건수/구직건수

주2)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구직건수가 타 시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아 취업률 및 구인배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볼 때, 취업률과 구인배수가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낮은 편임
- 울산이 청년 계층의 취업률 및 구인배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두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16] 청년계층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단위 : 명)

	취업건수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률	구인배수
전국	21,203	19,807	66,952	0.32	0.30
서울	4,308	4,533	13,636	0.32	0.33
부산	1,806	1,754	5,887	0.31	0.31
대구	1,165	574	3,847	0.30	0.14
인천	1,338	549	3,879	0.35	0.14
광주	680	649	2,400	0.28	0.27
대전	801	663	2,537	0.33	0.27
울산	503	689	1,449	0.35	0.47
세종	14	6	33	0.50	0.12
경기	4,533	5,395	14,153	0.32	0.38
강원	555	247	1,648	0.34	0.16
충북	749	522	2,242	0.33	0.24
충남	896	1,066	2,988	0.31	0.38
전북	797	689	2,565	0.31	0.27
전남	490	213	1,565	0.32	0.14
경북	1,143	707	3,776	0.30	0.19
경남	1,345	1,483	3,973	0.34	0.38
제주	85	68	367	0.26	0.20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0.1~2015.6)

주) 취업률 = 취업건수/구직건수

구인배수 = 구인건수/구직건수

- 위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기에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해 이 통계를 1차 가공하여 분석을 하고자 함
- 첫 번째 문제점인 변수의 속성을 변환시켜야 하는데, 일자리결합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취업자수, 구인자수, 구직자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취업자수는 플로우 변수로, 구인자수와 구직자수는 스톡 변수로 사용되어야 함

- 하지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는 취업자수, 구인자수, 구직자수 모두 플로우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인자수와 구직자수는 스톡 변수로 다시 계산해서 구해야 함
- 두 번째 문제점은 각 변수들의 대상 지역이 다르다는 점인데, 취업자수와 구직자수는 대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반면에 구인자수는 해당 기업의 사업자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됨
- 위의 문제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일자리결합모형을 구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근무지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에서만 반응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근무지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기준으로 조사되다 보니, 해당 지역에 취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결합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준석(2009)³¹⁾과 이상일(2014)³²⁾은 지역간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오차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일자리결합함수를 별도로 추정함
- 본 연구에서도 공간오차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일자리 결합함수를 추정해야 하지만, 지역내 구인구직간 결합 행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효과를 배제하고 관련 변수들도 지역간 이동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공하여 분석에 사용함³³⁾

31) 양준석(2009), 우리나라의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의 추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32) 이상일(2014), 경남 지역의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시군 패널자료 분석,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33) 공간구조행렬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는 시청 또는 군청 사이의 거리 역수를 토대로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 적정 방법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선정 과정을 위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본 연구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간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진행하고자 함

■ 취업자 수

- 취업자 수는 플로우 변수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취업자 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취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내에서 취업된 경우만을 고려하여 재계산함
-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E_{i,i} = E_i \times \alpha_i$$

$E_{i,i}$: i 지역 거주자의 i 지역 취업건수

E_i : i 지역 거주자의 취업건수

α_i : i 지역 취업 잔류율

- i 지역 거주자의 취업 잔류율은 지역별 고용조사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취업자들의 취업경로³⁴⁾를 통해 계산되는 잔류율을 사용함³⁵⁾

■ 구인자 수

- 구인자 수는 플로우 변수에서 스톡 변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워크넷의 구인 구직 자료는 2개월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간의 구인 신청건수가 모두 구인자 스톡값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2개월간 매칭이 되었거나 퇴장한 구인 건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구인자 수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거주자의 지역내 취업건수와 외부인의 해당 지역 취업건수를 제외함
- 취업건수는 구인 기간인 2개월간 매칭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t-1$ 시점의 취업건수는 $t-1$ 시점과 $t-2$ 시점에서 발생

34) 대학 졸업자의 취업 경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및 일반대학원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연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교육통계서비스의 취업통계를 통해 구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 통계지침 변경으로 취업경로 관련 자료는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09년 자료를 활용함

35)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인구이동통계 등을 통해 볼 때, 타 연령대에 비해 지역간 이동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잔류율은 이들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나, 분석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한 구인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t-1 시점에 매칭이 된 구인건수는 t-1 시점 취업건수의 절반이라고 가정함

-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SD_{i,t} = D_{i,t} + D_{i,t-1} - (E_{i,t-1} \times \alpha_i + E_{i,t-1} \times \beta_i) \div 2$$

$SD_{i,t}$: i 지역 t 시점 구인자수(스톡)

$D_{i,t}$: i 지역 t 시점 구인신청 건수

$E_{i,t}$: i 지역 t 시점 취업건수

α_i : i 지역 취업 잔류율

β_i : i 지역 취업 유입률

■ 구직자 수

- 구직자 수 역시 플로우 변수에서 스톡 변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워크넷의 구인구직 자료는 3개월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구직 신청건수가 모두 구직자 스톡값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3개월간 매칭이 되었거나 퇴장한 구직 건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구직자 수는 구직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 2개월간의 취업건수를 제외함
- 취업건수는 구직 기간인 3개월간의 매칭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t-1 시점의 취업건수는 t-1, t-2, t-3 시점에서 발생한 구직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시점별로 동일한 비율로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 t-1 시점에 매칭이 된 구직 건수는 t-1 시점과 t-2 시점의 취업건수의 1/3이며, t-2 시점에 매칭이 된 구직 건수는 t-2 시점의 취업건수의 1/3이라고 봄
-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SS_{i,t} = S_{i,t} + S_{i,t-1} + S_{i,t-2} - (E_{i,t-1} \times 2 + E_{i,t-2}) \div 3$$

$SS_{i,t}$: i 지역 t 시점 구직자수(스톡)

$S_{i,t}$: i 지역 t 시점 구인신청 건수

$E_{i,t}$: i 지역 t 시점 취업건수

[표 3-17] 대학졸업 취업자의 잔류 및 유입, 유출의 지역적 차이

(단위 : %)

	잔류율		유입률		유출률		흡수율	
	2004	2009	2004	2009	2004	2009	2004	2009
서울	76.0	75.4	80.5	93.2	24.0	24.6	51.4	55.3
부산	67.8	61.0	12.4	11.5	32.2	39.0	15.4	15.9
대구	54.8	52.1	93.7	88.7	45.2	47.9	63.1	63.0
인천	34.3	28.5	93.1	129.2	65.7	71.5	73.1	81.9
광주	53.8	57.6	19.9	20.9	46.2	42.4	27.0	26.6
대전	51.4	47.9	22.8	27.1	48.6	52.1	30.7	36.1
울산	66.6	70.8	76.9	114.2	33.4	29.2	53.6	61.7
경기	33.0	34.6	84.6	80.2	67.0	65.4	72.0	69.9
강원	35.5	38.4	19.0	16.7	64.5	61.6	34.9	30.3
충북	26.9	36.3	13.8	16.2	73.1	63.7	34.0	30.8
충남	20.4	21.0	13.6	15.2	79.7	79.0	40.1	41.9
전북	47.8	53.5	5.6	8.3	52.2	46.5	10.5	13.4
전남	45.9	50.1	35.8	46.8	54.1	49.9	43.8	48.3
경북	31.2	34.1	19.6	15.7	68.8	65.9	38.6	31.5
경남	64.6	66.8	55.9	66.7	35.4	33.2	46.4	50.0
제주	81.8	75.8	13.1	14.7	18.2	24.2	13.8	16.2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주) 잔류율 = 잔류 취업자/배출 취업자, 유입률 = 유입 취업자/배출 취업자
 유출률 = 유출 취업자/배출 취업자, 흡수율 = 유입 취업자/현 취업자

2) 분석 모형

- 일자리결합모형은 특정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자의 구직활동과 노동 수요자인 기업의 구인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접촉이 발생하고 이 조건이 만족할 경우 취업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임
- 이 모형은 일반적으로 각 변수들이 증가할 경우 종속변수가 오목한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Cobb-Douglas 생산함수 형식으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모형식은 로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음

$$\ln(E_{i,i,t}) = \beta_0 + \beta_1 \times \ln(SD_{i,t}) + \beta_2 \times \ln(SS_{i,t}) + \mu$$

- β_1 과 β_2 는 각각 일자리 결합에 대한 구직 활동과 구인 활동의 계수로서 탄력성을 의미하는데, β_1 이 클 경우에는 기업의 채용이 용이한 상황을 의미하며 β_2 가 클 경우에는 구직자의 취업이 용이한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일자리 결합 행태는 위 두 가지 변수 이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의 지리적인 입지 혹은 경제적인 위상, 산업구조 및 인구 구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변수들을 모형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지역 효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 변수를 설정함
- 뿐만 아니라 분석 자료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시간 고정 변수를 둠

3) 분석 결과

■ 전국 대상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를 통제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구인자 수와 구직자의 수는 모두 취업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상수	-0.3714	0.3077	-1.21	
구인자 수	0.7203***	0.0360	20.02	
구직자 수	0.1271***	0.0299	4.24	
지역 효과	서울	0.8082***	0.1256	6.44
	부산	0.7796***	0.0916	8.51
	대구	0.5363***	0.0819	6.55
	인천	0.8986***	0.0764	11.76
	광주	0.4325***	0.0604	7.16
	대전	0.8214***	0.0513	16.00
	울산	0.3285***	0.0526	6.24
	세종	0.5402***	0.0634	8.52
	경기	0.8403***	0.1308	6.42
	강원	0.8181***	0.0488	16.75
	충북	0.5339***	0.0621	8.60
	충남	0.5269***	0.0645	8.17
	전북	0.6635***	0.0631	10.51
	전남	0.6243***	0.0483	12.93
	경북	0.6237***	0.0696	8.96
경남	0.1897**	0.0922	2.06	

주1) Adj. R² : 0.841

주2)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탄력성 측면에서 구인자 수에 대한 탄력성이 0.7203으로 구직자 수에 대한 탄력성 0.127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찾는 것보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기업은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찾아 채용하는 것이 더 쉬운 반면에, 구직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족하는 조건의 기업을 찾기 어려워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별 지역 효과를 볼 때,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수값이 클수록 일자리 결합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계수값의 크기는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서울, 부산,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대구, 충북, 충남, 광주, 울산, 경남, 제주 순임
- 전반적으로 수도권외의 경우 일자리 결합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일자리 결합 즉, 취업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 번째 시사점은 구인 탄력성이 구직 탄력성보다 높다는 점에서 취업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임
- 하지만, 앞선 지역 경제 성장 유형 분석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이 고용률보다 지역 경제의 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점과 지역 경제 성장이 고용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인숙(2014)³⁶⁾의 연구결과를
-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인력 채용을 종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두 번째 시사점은 구직 탄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구직 희망자들의 눈높이가 지극히 높아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 먼저 노동 공급 입장에서 단순히 획일화된 대학 교육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종의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로 재편하여 능력에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36) 조인숙(2014), 강원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2발표논문

- 노동 수요 입장에서는 구직 희망자들의 눈높이를 낮출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근무 환경 및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결합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 전라북도만을 대상으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하였을 때,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에 대한 탄력성이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에 대한 탄력성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구인자 수에 대한 탄력성이 더 커 전국적인 현상이 전라북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업의 채용 과정이 더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상수	-11.2678***	1.131289	-9.96
구인자수	1.436458***	0.121631	11.81
구직자수	0.625829***	0.126477	4.95

주1) R^2 : 0.6729

주2)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청년계층 전국 대상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 청년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를 통제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구인자 수와 구직자의 수는 모두 취업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지역별 청년계층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상수	-0.2449	0.3237	-0.7600	
구인자수	0.0362*	0.0208	1.7400	
구직자수	0.6740***	0.0487	13.8300	
지역 효과	서울	1.3861***	0.1690	8.2000
	부산	1.1609***	0.1292	8.9800
	대구	1.0962***	0.1046	10.4800
	인천	1.3847***	0.0958	14.4500
	광주	0.8899***	0.0860	10.3500
	대전	1.0631***	0.0858	12.3900
	울산	0.8812***	0.0727	12.1300
	세종	0.0015	0.1614	0.0100
	경기	1.6933***	0.1537	11.0100
	강원	1.0304***	0.0651	15.8300
	충북	1.1034***	0.0792	13.9300
	충남	1.2214***	0.0841	14.5200
	전북	1.0063***	0.0888	11.3300
	전남	1.0129***	0.0607	16.6900
	경북	1.2262***	0.0964	12.7200
	경남	1.1082***	0.1149	9.6500

주1) Adj. R² : 0.9785

주2)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탄력성 측면에서 구직자 수에 대한 탄력성이 0.6740으로 구인자 수에 대한 탄력성 0.036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고용 행태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는 청년 계층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기업이 청년 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것을 뜻함

- 지역별 지역 효과를 볼 때, 세종시를 제외³⁷⁾한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수값이 클수록 일자리 결합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계수값의 크기는 경기, 서울, 인천, 경북, 충남, 부산, 경남, 충북, 대구, 대전,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울산, 제주 순임
-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비해 청년 계층은 수도권에서 취업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 충남, 경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거나 다양한 산업군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가 취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비해 청년계층이 취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구직 탄력성이 구인 탄력성보다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행태와는 정반대로 나타나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정책이 일반적인 취업 정책과는 다른 방향, 즉 노동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이는 청년 계층은 첫 직장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시기 내의 이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청년 계층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인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청년 계층의 취업 정책은 맞춤형 인재 육성, 즉 노동 공급의 질을 높여 기업이 쉽게 구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37)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하여 분석기간이 단 6개월에 지나지 않아 분석 샘플수가 부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청년계층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 전라북도만을 대상으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하였을 때, 구인자 수 및 구직자 수의 탄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 이는 분석 자료를 지역내 취업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공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유출 혹은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되는 취업 행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실제로 인구 이동 통계를 볼 때, 20~29세 사이의 인구 이동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혹은 수도권을 노동시장 권역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4] 전라북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상수	0.8910448	2.38748	0.37
구인자수	0.2467637	0.149728	1.65
구직자수	0.4727109	0.3397399	1.39

주1) R^2 : 0.2431

주2)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제 3 절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분석

1. 분석 방법론

- 지금까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노동 공급 혹은 수요 차원에서 집행되어 왔는데,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단순히 노동 공급과 수요의 매칭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임
-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단순히 노동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워크넷의 구인구직통계상 경상남도의 지난 5년간의 평균 구인배수가 1.01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새로운 일자리 수가 1.0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매칭된다면 실업률은 0%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2%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는 노동 수요·공급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미스매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은 실업과 결원의 조합으로 구성된 베버리지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실업을 노동수요 부족과 직종 혹은 상호간의 조건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임³⁸⁾
- 이 방법은 실업을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 기준으로 유용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구조적 미스매치와 마찰적 미스매치로 다시 분해하는 방식³⁹⁾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방법은 특정 지역의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현황을 유형별⁴⁰⁾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이 모형에서 전체 실업은 구조적 미스매치, 마찰적 미스매치와 노동수요부족의 합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기본 가정임
- 구조적 미스매치는 직종에 대한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요인으로 전체 취업가능건수⁴¹⁾에서 각 직종별 취업가능건수의 합을 뺀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직종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지표가 크다면 특정 직종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38) 김을식(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GRI연구논총, 제15권 제3호

39) Armstrong & Taylor(1981)에서 처음 제시됨

40) 실업의 유형을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

41) 취업가능건수는 구인인원과 구직자수 중에서 작은 값을 의미하며 만약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직이 가능한 수를 의미함

-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요인으로 직종별 취업가능건수에서 직종별 취업건수를 뺀 값으로 정의되며, 이 지표가 크다면 해당 직종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수요부족은 지역내 필요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 즉, 신규 구직자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 상태로 신규 구직자 수에서 신규 구인인원을 뺀 값으로 정의되며, 이 지표가 크다면 지역 경제 규모 및 성장이 노동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분석 결과

- 실업 유형을 분해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구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전체 실업의 9.9%인 약 23만명이고, 마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22.1%인 53명이며,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은 68.0%인 163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수요 부족이 일자리 미스매치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직종간의 노동 수급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치 요인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경남, 울산, 충북, 충남으로 해당 지역의 실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의 경우 무려 255.72%를 차지하고 있음
- 동일 직종 내에서 일자리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마찰적 미스매치 요인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남, 제주, 울산 순이며 세종의 경우 전체 실업의 50%가 이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경제 내에서 전체 노동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수요 부족 요인이 높은 지역은 대전, 세종, 서울, 강원, 인천, 부산 순이며, 대전의 경우에는 무려 이 요인이 전체 실업의 102.2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체 실업의 78.7%가 노동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미스매치가 14.1%, 마찰적 미스매치가 7.2%인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과 비교하면, 마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노동 수요 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개발이 시급함

[표 3-18] 지역별 실업 요인 분해 결과(2014년)

(단위 : %)

	구조적 미스매치		마찰적 미스매치		노동수요 부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전국	9.88		22.11		68.01	
서울	0.41	16	9.74	13	89.85	3
부산	4.78	13	14.77	11	80.45	6
대구	9.47	11	26.62	6	63.91	10
인천	6.70	12	10.61	12	82.69	5
광주	4.19	14	22.59	8	73.23	8
대전	0.57	15	-2.81	17	102.24	1
울산	47.86	4	30.43	4	21.71	15
세종	-43.82	17	50.70	1	93.11	2
경기	15.20	8	20.58	9	64.22	9
강원	16.69	7	-1.48	15	84.79	4
충북	41.86	5	24.48	7	33.67	14
충남	37.41	6	17.41	10	45.18	12
전북	14.14	9	7.15	14	78.71	7
전남	59.70	2	-1.78	16	42.08	13
경북	9.52	10	29.62	5	60.85	11
경남	58.55	3	44.16	2	-2.72	16
제주	255.72	1	40.46	3	-196.18	17

- 전라북도의 직종별 미스매치 현황을 보면,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직종은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과 생산 단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경비 및 청소 관련직과 관리직은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구조적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표 3-19] 전라북도 직종별 미스매치 규모

(단위 : 명)

직 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관리직	728	380	109	-505	-1,183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1,324	2,062	1,068	987	341
금융보험관련직	102	66	146	41	-65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318	308	117	970	45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	4	11	-43	-4
보건, 의료 관련직	417	307	64	527	190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85	714	721	528	21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740	797	499	504	34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31	598	379	14	56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1,403	1,786	2,156	1,987	2,29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588	423	7	-3,586	-5,757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63	332	91	-371	-350
음식서비스 관련직	876	731	309	456	433
건설 관련직	987	1,277	1,483	823	319
기계관련직	2,850	2,844	3,505	3,155	2,129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1,087	1,069	1,373	1,627	1,502
화학관련직	495	298	475	554	289
섬유 및 의복관련직	566	400	-344	-1,104	378
전기, 전자 관련직	1,256	1,269	2,833	826	377
정보통신관련직	119	227	377	113	138
식품가공관련직	911	1,024	1,019	1,174	50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631	5,450	5,349	4,402	2,612
농림어업 관련직	494	1,305	786	286	616

- 연도별로 전라북도의 실업 요인을 분해하면, 마찰적 미스매치 요인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구조적 미스매치 요인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전라북도 연도별 실업 요인 분해 결과

(단위 : 명, %)

	총실업	구조적 미스매치		마찰적 미스매치		노동수요 부족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2010년	98,790	3,858	3.91	20,378	20.63	74,554	75.47
2011년	78,877	7,033	8.92	23,671	30.01	48,173	61.07
2012년	77,563	7,832	10.10	22,532	29.05	47,199	60.85
2013년	86,686	11,378	13.13	13,364	15.42	61,944	71.46
2014년	81,035	11,460	14.14	5,791	7.15	63,784	78.71

- 위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라북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노동 수요 부족을 해소하는 것임
- 즉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구조적 미스매치 요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 인력 양성 사업이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에 맞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마찰적 미스매치 요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공공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별도로 실시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제 4 절 시사점

-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 요인은 고용률 증가에 의한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지역 고용이 산업 성장의 중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
- 하지만, 전라북도의 노동 시장은 전국 평균 대비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청년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고용률 지표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연령대의 고용률은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변동이 심한 편이며, 20~24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 경제적 불안에 따라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라북도의 감소 추세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라북도의 취업난의 가장 주된 원인이 노동 수요 부족이라는 점과 전라북도의 노동 시장이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구직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노동 생산성 향상이 고용률보다 지역 경제의 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점과 지역 경제 성장이 고용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에 반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 청년 계층의 고용 시장은 구직활동이 구인활동보다 더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고용 시장의 트렌드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인자보다 청년 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동성이 크기 때문이 이들의 노동 시장은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내 노동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청년 계층의 취업 정책은 맞춤형 인재 육성, 즉 노동 공급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전라북도의 구조적 미스매치 요인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이 특정 산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산업 수요에 맞춰 인재 육성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제 1 절 산업 및 고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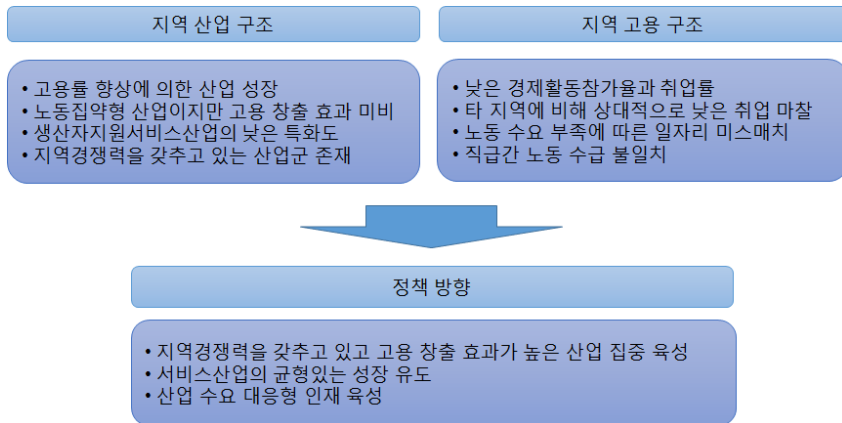
제 2 절 청년 일자리 정책

제5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제 1 절 산업 및 고용 정책

1. 정책 방향

-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라북도의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수요 부족이며, 그 다음으로 직급간 노동 수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치 요인이 점점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은 고용률 향상에 따른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고용 창출 능력이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 육성을 통해 노동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산업별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그림 5-1] 산업 및 고용 정책 방향

-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서 고용 창출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해야 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후방 서비스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해야 함

- 고용 차원에서는 지역내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산업별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 및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추진 과제

■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는 고용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탄력성은 낮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중심이기 때문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정책과 함께 기업 지원형 서비스 등의 제조업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함
-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인력 채용을 중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필요함
 - ① 사양산업과 침체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
 - ② 농업, 식품산업과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성장산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같은 경쟁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
 - ③ 기업에 대한 지원은 노동절약형 설비 투자보다는 자원절감형 설비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
 - ④ 중앙정부의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같이 도비 투입을 통한 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투입에 대한 근거 요소로 고용을 첫 번째로 설정하여 사업 실행여부를 판단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전라북도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지역 특화도는 낮지만, 산업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볼 때, 경쟁력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지역 내 산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 특히,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전북 연구개발특구와 전북 디자인센터 등을 통해 지역 R&D 기반이 갖춰지게 될 경우에는 연계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 산업군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종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외부 기업 및 인력을 끌어들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자체 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① 외부 기업유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및 지역 정착 지원
 - ② 외부 전문인력이 집적할 수 있는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
 - ③ 장소마케팅을 통한 홍보로 기업 집적을 유도
 - ④ 기업간 협력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 지원
 - ⑤ 유치 기업과 전북 소재 대학간 MOU 체결 지원 및 커플링사업 대상 확대

■ 외부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활성화

-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창업하는 경우보다 외부 기업을 유치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
-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규모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지역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⁴²⁾하여 하며, 기업 유치의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U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⁴³⁾가 생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 익산에 주얼리산업을 대상으로 U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턴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U턴 기업 유형 〉

- U턴기업의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규정

- ◆ (유형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국내 사업장 여부와 무관)
- ◆ (유형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 (유형 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해외 사업장 유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 주요 지원 내용 〉

- (조세감면) 법인세 및 관세감면 등의 근거 마련(제5조)
- (보조금 지원) 균특법상 지방이전보조금 제도를 통한 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제6조)
- (입지 지원) U턴기업 전용공단의 지정, 경자구역 입주 등을 위한 근거 마련(제7조)
- (동반복귀 지원) 동반복귀 U턴기업에 대해서는 전용단지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 조성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제10조)

■ 노동수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 전라북도의 경우 관리직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제조업 계열 생산직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음에 따라 산업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급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42) 투자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자체간 경쟁에 의해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입지 적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의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됨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만약 고급형 인재 양성에 치우치게 되면 구직자의 기대 조건이 높아지게 되어 오히려 외부 유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① 전라북도 인력수급통계 시스템 구축
 - ② 기업과 대학간 인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형 인력수급연계 시스템 구축
 - ③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고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 ④ 일자리 매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제 2 절 청년 일자리 정책

1. 정책 방향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 청년 계층의 고용 시장은 구직활동이 구인활동보다 더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고용 시장의 트렌드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인자보다 청년 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동성이 크기 때문이 이들의 노동 시장은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내 노동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청년 계층의 취업 정책은 청년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 송영남(2012)⁴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순위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미래비전 향상, 근무환경 개선, 기업의 사회적 평판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2. 추진 과제

■ 마이스터고⁴⁵⁾ 확대 및 커플링 사업 강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대안들은 주로 졸업자들에게 맞춰 왔으나, 중앙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이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볼 수 있듯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이 재학생에게까지 넓히고 있음
- 즉, 학교 진학때부터 취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전라북도가 여기에 맞춰 할 수 있는 방안은 마이스터고를 확대 지정하고 커플링 사업 대상을 넓히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 활용

-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⁴⁶⁾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및 양호한 근로환경, 기업지원시설의 구비 등을 통해 집적경제를 극대화함
- 지식산업센터의 탄생 배경은 청년층이 노후 산업단지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융복합

44) 송영남(2012),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특성의 가치 추정 연구,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45)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실제로 김군수(2014)⁴⁷⁾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입주 이전과 비교할 때 20, 30대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청년층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음
- 전라북도에 현재 7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청년층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지로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①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군산, 익산)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인근을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

[표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p>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시·도지사, 공단, 그 밖의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한다.</p>
<p>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를 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건설자금 우선지원, 산업 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자금 우선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 신용보증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 ②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위주로 운영하여 지식기반산업, 청년창업 및 벤처 기업 육성 지원
- ③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단위 규모를 단지화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상업 및 편의시설과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제공

47) 김군수(2014), 청년일자리 거점: 복합지식산업센터,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 산업단지캠퍼스는 대학과 기업간의 상시적·현장밀착형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산업단지내로 대학과 대학원의 일부 학과를 이전시키는 제도로 학교당 연 10억원을 3년간 지원함
- 2013년 대학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산업단지 안의 건물을 빌리거나 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례 중 하나로 유한대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여 2013년에 개교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터학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스마트 커뮤니케이션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함
 - 기존의 학사시스템을 전면 탈피하여 1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3학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4주 이상 현장 실습 및 인턴실습 과정을 진행
 - 단지내 기업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산업체 기술자를 교수로 초빙하는 등 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의 주체는 대학이지만, 신청 자격 중 하나로 국비의 10% 이상 현금출자해야 하는 민감부담금의 주체가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 정해 있어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도 포함하고 있어 입지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제6장

결론

- 제 1 절 연구 요약
- 제 2 절 정책 제언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 산업의 성장경로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수급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 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도 동반되어야 함
- 산업구조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필요 일자리는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고급 인력으로 수요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 역시 바뀌어야 함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한편, 전체적인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을 제시되어야 함
- 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 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여 공급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인력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고용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 요인을 노동생산성과 고용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전국 평균 대비하여 노동생산성의 기여도보다는 고용률 향상에 따른 성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산업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앓는 전라북도는 저부가가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낮아 기업 유치 및 생산성 증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정책과 함께 기업 지원형 서비스 등의 제조업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함
-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타지역 대비 경쟁력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차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결과, 성장산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며 경쟁 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이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전략을 강화해야 함
-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 요인은 고용률 증가에 의한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지역 고용이 산업 성장의 중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
- 하지만, 전라북도의 노동 시장은 전국 평균 대비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청년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취업난의 가장 주된 원인이 노동 수요 부족이라는 점과 전라북도의 노동 시장이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구직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반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구인구직활동의 메카니즘이 전 연령대의 경우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년 계층의 취업 정책은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 ②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③ 외부기업의 직접투자 촉진 활성화
 - ④ 노동수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청년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실시되어야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안함
 - ① 마이스터고 확대 및 커플링 사업 강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 ② 지식산업센터 활용
 - ③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제 2 절 정책 제언

-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 취업난이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임
- 최근에는 노동생산성이 기술 개발에 따라 점점 향상되면서 취업계수 및 취업탄력성 등 고용창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노동 수요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 즉 일자리 정책은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양산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사양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만들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고용을 흡수하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요구됨
- 일자리 정책 관점에서 단순히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치우칠 경우 오히려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에서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이제는 정책 고려 대상의 하나로 봐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용 증대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연구 보고서

- 김군수(2014), 청년일자리 거점: 복합지식산업센터,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서옥순(2014),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간의 관계분석 및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송부용(2013), 경남지역 대졸자의 취업 현황과 경로 분석, 정책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 주수현(2013), 부산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BDI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 학술 논문

- 공덕암(2012), 경남지역 고용현황과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5호
- 김을식(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GRI연구논총, 제15권 제3호
- 남병탁(2014), 지역별 일자리 매칭함수 탄력성 비교,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 선종갑(2006), 제주지역 컨벤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RSI와 RGRD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관광산업연구, 제1권 제2호
- 송영남(2012),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특성의 가치 추정 연구,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 심재현(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75권
- 양준석(2009), 우리나라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의 추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 이상일(2014), 경남 지역의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시군 패널자료 분석,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 이정섭(2011),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불일치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 기타 문헌

- 강승호(2014), 강원지역 문화, 관광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3발표논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0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6 정책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09.09),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 김홍배(2007),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조인숙(2014), 강원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릉본부 2014년도 지역경제세미나(강원경제의 일자리 창출: 평가와 전략), 제2발표논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4),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노동, 일자리 공약, 노동사회, 제177권

□ 기타

-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0.go.kr)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통계청_국가통계포털(www.kosis.kr)

Jthink 2015-PR-07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발행인 | 강현직

발행일 | 2015년 12월 1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134-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